

PA 간호사 업무 범위 이견... 오늘 '간호법' 통과 될까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파업 예고...여야, 간호법 제정안 긴급 심의 검사·진단·처치 등 대통령령 놓고 이견...오늘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 전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간호법 제정안을 긴급 심의한 뒤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수정안을 심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의 수정안에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업무범위 등 주요 쟁점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쟁점 사안을 해소한 법안을 들고 오면 민주당도 28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하는 일정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리적 대안을 가져온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28일 오전이라도 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통과시킨다면 당일 본회의에까지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은 여야가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예고한 민생 법안 가운데 하나로,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여야는 아직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여당안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했으나,

야당안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그러나 의료대란 사태가 확산하면서 국회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의 발걸음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29일 전국 병원 61곳에서 동시 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의료현안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간호법에 반영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PA 간호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전공의가 떠난 공백을 메우면서 불법에 내몰리고, 환자들은 심각한 의료사고 위험을 겪고 있는데도 PA 간호사 제도화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태"라며 파업의 이유를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 역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된 간호법을 기왕이면 빨리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간호법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도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간호법을 요구하는 거지, 무조건 신속 통과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요 쟁점 사안의 해소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의 빠른 통과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지도부의 '보건의료 현안 긴급 간담회'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은 논의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박균택, 검찰 특활비 악용 금지 제도 개선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악용 금지 및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박균택 의원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용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행자료를 요구했다"며 "특수활동비가 정치수사를 일삼는 특수부를 위한 '격려금 제도'로 악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수사를 일삼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전주지검, 성남지검의 특수활동비 배정 내역을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겠다"며 "특활비 집행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내년 예산에서 대폭 삭감하거

나, 그 감소 부분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부 검사와 수사관들의 인권보호활동 수당, 서민을 위한 수사활동 수당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3년 78억 9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으나, 국회의 결산 심사에 필수적인 집행세부내역과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해 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실, 한동훈 의대 증원 보류 제안 '난색'

"증원 예정대로 추진" 원칙론...30일 당정 만찬 회동 의제 관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중재 카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를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난색을 보이면서 해법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놓고 의견 차이를 드러낸 바 있는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가 핵심 현안을 놓고 또다시 불협화음을 내면서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모집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기로 한 정부 결정은 대입 시험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일단 보류하자는 게 한 대표의 제안이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달래는 절충안인 동시에, 현재 의대 1학년생의 대규모 유급과 급격한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차질 우려도

반영된 것이라고 당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대표는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하는 등 중재에 부심하고 있다.

한 대표의 한 측근은 통화에서 "한 대표는 어떻게든 의료 문제의 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5년도는 수정하기 어렵고 다만 2026년도는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충분히 같이 조정하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증원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의대 증원은 정부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근거, 미래 전망 등을 정확히 측정해 향후 의사를 1만명 정도 증원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책임 있게 결정

한 사안"이라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 측에서는 대통령실의 원안 고수 입장에 부글부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개월 이상 이어진 의료 공백에 이른바 '응급실 뱅뱅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자칫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위기가 심화하면 여론 전체가 민심의 치명타를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황이 심각한데 대통령실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다"며 "저러다 추석 연휴 기간 사고라도 터지면 우리부터 박살이 나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마침 오는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다만, 한 대표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물밑 중재에 주력하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등 이번 사안이 당정 갈등 소재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자가격리 중인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의견 조율 과제도 남아 있다.

/연합뉴스

서삼석 "농어민 예산 미집행 행위 대책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피감기관의 과잉 편성 예산으로 인해 이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질타했다.

서삼석 의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농어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검토 소홀로 과다 계상된 사업들이 집행을 저조로 불용, 이월, 전용되는 실태는 정부 부처의 관심 및 인식 부재"라며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등 농해수위 관계기관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행위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삼석 의원은 지속적인 수요 감소로 집행

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다 계상하고, 정작 수요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전용으로 매꾸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관리 실태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매년 집행률이 저조한 (최근 5년간 평균 52%) '농지임차임 대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 410억 원(483%) 증가한 495억 원을 편성하고, 매년 300억 원 이상 전용하는 '농지연금사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207억 원이나 축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환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가족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병원 부모님을 모셔도 좋은 "동행요양병원"이 되겠습니다.

의학, 한의학 협진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통증치료

면회공간

환우분의 만남의 장소가 병원1층에서 면회와 운동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인지프로그램, 직업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내 생활공유

환우분의 근황 및 일상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동행요양병원은 "환자의 안전"과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입니다.

연중무휴 | 인종기 | 2020.10.19 ~ 2024.10.18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동행요양병원

동행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광주역앞 (신안동 2-3)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26

입원문의
062) **720-2000**